

# 노건평씨 '30억 공범' 인정될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가 세종증권 매각비리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30억 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과연 이 같은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주목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건평씨는 2005년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회삼씨 형제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종캐피탈 홍기욱 사장과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을 연결해준 뒤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정씨 형제지만 검찰은 노씨도 성공사례비를 예상하고 정씨 형제와 한 배를 탔다고 보고 30억원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핵심은 노씨를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 檢 “오락실 수익금 노씨 몫 있어” 영장 자신

### 노씨 혐의 부인...정씨 형제 법정 진술 주목

지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다고 할 지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피고인이 부인할 때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해 입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노씨가 30억원 수

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인수로비에 참여했을 가능성 ▲사례를 받을 것이라 사실 정도만 알고 동참했을 가능성 ▲사례와 무관하게 인수를 도와준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노씨가 순수한 의도로 "말 좀 들어 보라"며 홍 사장과 정 회장을 연결해줬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

노씨 역시 "오락실 수익금은 모르는 일"이라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30억원 가운데 '노씨 몫'이 있었고 오락실 수익금 등 최소 3억~4억원 이상이 노씨에게 흘러간 단서를 찾아낸 만큼 노씨를 공범으로 보고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특히 정씨 형제와 홍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노씨와 정씨 형제가 교감했다든지 노씨에게 범행의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정씨 형제가 홍 사장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노씨의 반박이 검찰 논리를 압도한다면 법원은 노씨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평형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李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전격 연기

## “제1야당 빠진 만남 의미없다”

### 靑, 재추진 불구 성사 불투명

이명박 대통령이 3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불참을 이유로 여야 대표회동을 전격 연기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청와대가 민주당이 참석하는 여야 대표회동을 재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성사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회동을 2시간여 앞두고 자유선진당측과 물밑협의를 통해 회동을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당초 회동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동만 청와대 대변인은 연기배경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선진당과 창조의 모임은 당면한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했다”며 “그동안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참석을 설득했으나 결국 민주당 측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회동 자체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회동을 연기한 것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불참 속에 예산안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민주당이 참석하는 여야 정당대표 회동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여야 대표 오찬회동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의 강경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데는 여러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1 야당 대표를 뺀 회동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현재의 국난적 상황에서 누구를 빼고 회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회동을 강행해봤자 '반쪽'에 그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로 감안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및 선진당 창조의 모임과의 공조를 통해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 여야 대표 회동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경제난 극복과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청와대로선 손에 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여야 대표 회동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경제위기 극복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청와대-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시카차가 좀처럼 좀처럼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과 상임고문 연설회에서 불참 배경과 관련,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이 예산안과 국민감시 입법, 국민 편 가르기 입법 등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한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국정감사 평가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감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김효석(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의원 등 수상 의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국회의원 8명 ‘국감 우수·모범의원’

### NGO 모니터단 총 85명 선정 비례 김충조·이정현 의원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8명이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모범의원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전체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85명이 국정감사 우수·모범의원으로서 선정됨에 따라 사실상 '퍼주기 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270개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제18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를 종합모니터한 결과, 총 85명의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모범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강운태, 이용섭, 김영복, 최인기, 주승용, 우윤근 의원 등이 우수의원으로서 선정됐으며 김효석 의원은 모범의원, 이낙연 의원은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뽑혔다.

또, 여수 출신의 민주당 비례대표인 김충조 의원은 모범의원, 곡성 출신의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이정현 의원도 우수의원으로서 선정됐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우수·모범 국회의원이 너무 많이 선정됨에 따라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면이 없지 않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우수·모범의원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수질개선 가치 있어 대운하 구상 유효”

### 박병원 靑 경제수석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4대강 수질개선사업은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운하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경북 북부에서 소백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대운하가 되는 것”이라면서 “(수질개선) 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연결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 대운하 구상이 유효함을 시사했다.

박 수석은 이날 관훈클럽이 서울 태평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수질개선사업은 어려운 지방 건설업계에 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사회·경제적 문제가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막상 결과를 보면 다들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의 경우 조지도 없었고 현재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수질개선 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돈 얼마 안들고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 해도 시간이 걸려 이 정부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신문·방송 겸영’ 정치권 쟁점으로

### 輿, 신문법 등 개정안 확정

### 민주 “언론장악 막아 내겠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가 3일 신문법을 비롯한 7개 언론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포함한 언론관계법 개정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가 쟁점이다. 이미 위헌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지만 한나라당의 경우 미디어 환경 변화를 이유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겸영을 전면 허용하는 규제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에 앞서 선(先) 공론화를 주장하며 외국자본의 시장 참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법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여 의도 당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IPTV시대

를 맞아 지상파나 보도전문 채널에 크게 메리트가 없고, 장벽의 의미가 별로 없다”면서 “그럼에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벽이 미디어 산업 전반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측면이 있다”고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진병현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 문제와 외국인 투자지분 확대 문제는 우리 언론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우선 필요한 사항”이라며 “한나라당이 다수의 숫자만 믿고 관련법을 일방 제출하는 것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상임위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부터 치열한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법국 위원장은 연내 법안 처리에 대해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할 것”이라고 법안 제출 후 상임위 상정 및 논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의·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

## MDPass 의(醫)학원

진학전문교육기관

수능을 뚫었지만 예비 대학생  
O(Open) M(Match) S(Success) 캠프  
수능 이후 학업준비 과정  
수능 이후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수능 이후 대학 편입준비 과정

서울유명대학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1월 2월

진학설명회

12월 13일(토) 오후 2시

MDPass

의학원

☎ 263-5453

☎ 255-9119

"광주에 서울고시업이 공우편 합격도 없다"

서울고시학원

☎ 514-4560

"광주에 서울고시업이 공우편 합격도 없다"

"광주에 서울고시업이 공우편 합격도 없다"

"광주에 서울고시업이 공우편 합격도 없다"

"광주에 서울고시업이 공우편 합격도 없다"

"광주에 서울고시업이 공우편 합격도 없다"